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물레방아 도는데

김 동 률
서강대 교수·언론학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유행가는 '물레방아 도는데' 였다. 물론 유행가에 앞서 웬만한 동요는 취학 전에 이미 끝냈다. 그때 배운 동요가 아직도 선명하다. 과꽃이 어떤 꽃인지도 모르면서 '올해도 과꽃이 피었고 과꽃을 좋아한 누나는 꽃이 피면 아예 꽃밭에서 살았다'며 목청껏 외쳤던 기억이 새록하다.

그뿐인가. '과꽃을 보면 누나 얼굴이 떠오르고 시집간 지 영영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난다'는 구절에는 어린 마음에도 숙연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동요는 딱 그 뿐이었다. 초등 시절엔, 당시 폭풍같은 인기속에 등장한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가 곧바로 나의 애창곡이 됐다. '돌담길 돌아가며 또 한번 보오오고'를 정말 열심히 따라 불렀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렀다. 학교 오가는 길, 길옆 전파사도 종일 이 노래를 틀었다. 하지만 이 노래가 그다지 행복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때는 대학에 입학해서다.

나와 같은 386 세대들의 고민은 이 땅의 노동운동이었다. 민주화와 함께 어깨를 짓누르던 노동현장의 질곡 속에 이 노래가 만만치 않음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다.

1972년 발표된 노래는 창작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농(離農)현상으로 도시로 몰려든 개발연대 한국인들의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비애를 형상화한 노래로 이해된다. 등 떠밀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물레방아 도는데'를 통해 떠나온 고향에 대한 사무침을 달랬다.

'천리타향 멀리 가더니 가을 다 가도록 소식이 없는' 떠난 이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은 지금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너무 가난해서 떠나왔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노스탤지어를 노래를 통해 달랬던 것이다. 꺽기로 불리는 창법도 창법이지만 노래는 너무도 슬퍼 결국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 시절 한국인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떠난 십대 소년·소녀들은 '공순이'나 '식모'로, 또는 '공돌이'로 불렸고 그들이 둥지를 튼 곳은 구로공단이다.

'공순이'는 특히 서러웠다. 가난해 못 배웠으니 당연히 무식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은 대부분 남동생이나 오빠 학비를 벌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밀려 떠난다. 속옷에다 작은 돈주머니를 달아주던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온 그들이다.

그래서 1970년대의 여공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이도 많았다. 그 시절 구로공단 여공들은 국졸 혹은 국교 중퇴가 대부분이었다. 영어로 된 라벨을 다는 것은 한글도 모르는 소녀들에게는 고역이었고, M과 W를 혼동해 작업반장에게 따귀를 맞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그런 구로공단이 최첨단 디지털단지로 변했다. 봉제, 가발산업이 저문 빈자리엔 화려한 쇼핑몰이 들어섰다.

올해는 구로공단 조성 50년이 된다. 이를 기념한 '공단 노동자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관은 벌집으로 불리던 여공들의 주거공간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겨우 발을 뻗을 수 있는 작은 방, 수십 명이 살지만 사춘기 소녀들이 아침마다 긴 줄을 서야 했던 딱 한 개뿐인 푸세식 화장실 모습에 가슴이 짠해 온다.

그래서 노래 '물레방아 도는데'는 지난 산업화 시대에 국민가요처럼 불려졌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가 민주화와 산업화일진대 산업화 측면에서 가장 도드라진 시대정신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은 그 시절의 공화국을 담당했던 정치인도, 경제정책 입안자도, 몇몇 이름난 민주화 운동가도 아니다.

인간에게 배고픔만큼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지긋지긋한 배고픔과 대물림된 가난이 싫어 정든 고향을 떠나 공순이, 공돌이란 이름 아래 꽃다운 젊음을 바친 이 땅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산업화의 빛나는 주인공이 아닐까.

왔다고 느낄 때쯤이면 저만치 떠나는 가을, 구로공단 50주년에 받치는 나의 헌사다.

의료칼럼

죽은 자의 권리와 법의학자의 절규

김 윤 신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세월호 여파로 여전히 세상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여러 자리에서 많은 지인들이 필자에게 묻는다. 죽은 이가 그 사람이 정말 맞느냐고… 그렇다고 대답해주면 고개를 갸웃하며 미덥지 못하다는 표정들이다. 신뢰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회의 장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더욱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불신의 뿌리 깊은 과거를 필자는 주검을 돌보는 업무 중에 자주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시제도가 불신의 깊은 골에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윤모 일병의 사인이 '기도폐색성 질식사'에서 '외상성(속발성) 쇼크'로 군 당국에 의해 바뀌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후자의 사인이 맞는데 어떤 이유로 전자의 사인이 제시되었던 것인지 속사정이 궁금할 따름이다. 이렇듯 죽은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법의학적 증거마저 온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사인이 오락가락 하기도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의 결과이자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민법의 소멸시효에서 나온 법언이라 딱히 검시제도와 관련해 큰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으나,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읽히면서 영원히 잠든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보니, 어쩜 이리도 우리 검시제도의 한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에 이르고 만다.

검시제도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오래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초상집에 다녀오던 노인이 실종됐다가 동네 인근 개울물에 빠진 채 발견됐고, 시체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동네 의사의 검안소견을 근거로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니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에서 이 죽음에서 부검을 생략해도 되는 지를 필자에게 물어왔다. 개울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되물었더니 현장조사 기록에는 수심이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만약 개울물의 수심이 무릎에 차는 정도였다면 그 노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가 된다. 성인이 얕은 물에 빠져 죽기는 어렵다는 게 상식 아닌가. 불비한 제도가 의문을 만들고 쌓인 의문은 불신의 골을 판다.

검시제도는 필자가 법의학에 입문하기 훨씬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고질적인 문제지만 아직까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말았다.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 당장 가능한 방법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 처방,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선, 의료법상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문서 양식부터 분리해야 한다. 임상의사가 환자의 병상을 돌보면서 죽음의 경과를 파악하고 있던 죽음에 대한 증명과, 죽어서 발견된 시체에 대한 죽음의 증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임상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전문가일 뿐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전문가일 수 없다. 산 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와 죽은 자의 권리를 돌보는 의료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이미 임상의료는 전문화를 넘어, 세부전문화가 확립되었다. 죽음의 조사 또한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권의 일부다. 마땅히 사인의 조사는 법의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아울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에 검시전문가를 배치해 죽음에 대한 조사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음은 법제도의 정비와 검시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검시관련 법을 제정해 검시업무의 영역과 자격, 권한 등을 명확히 해둬야 하고, 법의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확보방안을 갖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법의학자의 절규다.

기 고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양 성 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오늘은 제18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노인의 날은 1990년 독일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한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에 따른 노인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48.6%(2011년 기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OECD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3.5%이고 스웨덴이나 독일, 덴마크 등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10%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빈곤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독거노인의 숫자도 106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6%)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38만 명(20.8%), 2035년에는 현재보다 3배 가까운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절반은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이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핵심문제이고 보면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 빈곤율, 자살률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큰 방향은 두 가지 줄기다.

하나는 가정에 있는 노인들을 복지시설로 끌어들여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파트와 시골 마을의 '경로당'이나 '양로원'부터 시작하여, 구(면)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및 활력과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이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좋은 복지시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이용을 못하는 노인들과 빈곤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의 두 번째 줄기는 빈곤노인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문제의 직접적 해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다, 기초연금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429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20만원씩(부부합산 32만원)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0만원에 한 참 못 미치는 낮은 급여수준이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큰 리어커를 끌고 무단횡단도 마다하지 않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받는 돈은 파지 1Kg에 50원, 2~3일 동안 리어커에 가득 채워서 5000원 정도 받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여도 소득이 낮으니 그들의 생활은 빈곤하고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큰 방향은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의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아무리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좋아져도 양질의 일자리만한 복지는 없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빈곤노인의 문제해결에 팔소매를 걷어 붙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전남 해상관광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지난달 30일 신안 홍도 부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사고는 다도해의 비경을 자원으로 해상관광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전남도에 큰 경종을 울렸다. 다행히 탑승객 110명이 모두 구조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홍도관광을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사고 당일에는 전남도가 서울에서 서남해안 유명 섬 관광지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려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일부에선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안전대책이 겉돌게 되면 큰 불상사는 물론, 전남의 관광 활성화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홍도를 비롯한 거문도와 백도 등 서남해 유명 해상관광 항로를 따라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최근 7년간 홍도 방문객은 한 해 평균 70만9330명이나 됐다. 여수의 거문도와 백도에도 연간 1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해경 등의 정기 순찰 등 안전대책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이번 사고는 해경의 허술한 해상관광 안전체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목포해경 흑산파출소 홍도출장소 직원 1명은 사고 직후 유람선에 몸만 싣고 달려갔을 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2명이 교대 근무 중인 홍도파출소에 순찰정은 단 한 척도 없는 실정이다.

홍도를 관할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흑산파출소도 순찰정은 1대뿐이다. 게다가 홍도출장소까지는 30분 이상 걸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전남도와 해경은 한시 바삐 서남해상 관광지 사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유명 해상관광 코스에는 정기 순찰정을 배치하고 유람선 운항 안전대책도 철저히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관련법을 개정해 유람선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 예방만이 관광전남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지방대 몰락 부르는 정원 감축 재고해야

신입생 정원 축소 규모가 100명이 넘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조선대가 384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대학 중 감축된 입학정원의 96%(7844명)가 지방대 몫인 반면, 수도권은 4%(363명)에 그쳐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가 384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대·호남대 각각 183명, 한려대 141명, 광주여대·동신대는 각각 100명이 감축됐다. 각 지역 대학 수 대비 대학당 감축 인원은 광주가 평균 93.4명으로 전북(114.36명)과 부산(101.07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교육부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원 감축은 그동안 대학의 방만·부실 경영과 비리 운영, 충원율 저조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입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대학은 포화상태에 있어 진즉 구조 조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의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데다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을 감축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지방대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의 차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그 수준이 서울 등지에 못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학과별로 얼마든지 수도권을 능가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들도 많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행 감축 기준을 수정해 더 이상 지방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등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반면교사(反面敎師)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이 메달 종합 순위 2위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전 회원국이 참가한 역대 첫 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신기록도 적잖게 나와 '대회' 측면에서 여타 대회에 견줘 손색이 없다.

하지만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유치한 아시안게임이지만 대회 운영 면에서는 그간의 아시안게임에 훨씬 못 미치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우선 '학예회 수준' 이라는 평가를 받은 개막식을 비롯해 대회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성화가 점화된 지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꺼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경기장 내 화장실에선 소변이 흘러나오고, 선수촌엔 냉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 배드민턴 경기장에선 정전으로 경기가 중단되었고, 선수촌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선수들이 2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뿐인가. 늦은 밤 셔틀버스가 운행을 멈춰 길을 모르는 외신기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통역요원은 보수가 적다며 100명이 단체로 그만뒀다. 식중독균 검출로 도시락 배달이 중단돼 점심을 먹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비치발리볼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은 카드게임을 하고 카바디 운영지원 요원들은 화투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국제대회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미숙함을 드러낸 인천아시안게임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 바로 반면교사 아닌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제전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린다.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다. 광주시에서는 현장 경험을 익히기 위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15개 분야 3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반면교사 삼아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U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 살피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